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황
3, 16면

우크라이나
전쟁
6면

채 해병 사망
은폐 의혹
2, 3면

투쟁을 준비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
7면

남아공 총선
결과
12~13면



채 해병 사망 사고 진상 은폐에 윤석열이 정치적 책임 있다

관련 기사 2, 3면

채 해병 사망과 수사 외압 책임 규명

대중 투쟁이 열쇠다

잇단 훈련병 사망에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책임 있다

김문성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됐다.

언론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며 바람을 잡았으나 이탈은 거의 없었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고 여당도 톨톨 뭉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6월 1일(토) 각각 서울역,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정부 항의 집회를 열고 새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6월 1일 민주당 주최 집회에는 3만 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그만큼 공분이 큰 것이다. 민주당 집회 종료 후 참가자 수천 명이 윤석열 퇴진 촛불행동 집회로 행진해 갔다.

민주당은 5월 30일 새 국회에서 바로 새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 새 법안은 수사 범위를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으로까지 확대했고, 특검 추천에 민주당이 아닌 야당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야권 공조를 이어 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여당의 단합 태세를 보면, 야권 공조를 해도 윤석열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재의결하기가 쉽지 않다. 각종 개혁 입법도 마찬가지다.

법안 통과에만 집착하면, 여당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이유로 내용을 삭감하라는 압박만 더 커질 것이다. 오히려 우파에 끌려다니게 될 수 있다.

채 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과 책임 규명은 특검 도입 자체가 아니라 대중 투쟁이 얼마나 활발하게 벌어지느냐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2016년 말 박근혜를 궁지로 몬 것은 특검이 아니라 거대한(12월 초순경 230만

명)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였다. 정권에게 불리해진 세력관계를 본 검찰이 박근혜에게 등을 돌리자 박근혜는 검찰 수사를 일단 중단시켜 시간을 끌려고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했다. 그 특검은 퇴진 시위의 압력 속에서 몇몇 진실을 밝혀냈다.

대중 동원

민주당은 화전양면 작전을 계속 구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월 1일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에는 힘들다. 이제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 ...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없이 쉬지 않고 함께 싸우겠다.”

민주당은 8일 전복을 시작으로 지방 순회 집회도 열겠다고 한다.

동시에, 지난주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반대를 수용해 보편 지급 원칙을 포기했다. 부자들을 달래려 종합 부동산세 완화 주장도 내놓았다. 3일에는 윤석열의 저출생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며 저출생 대책 여야정 협의기구를 제안했다.

이런 모순된 신호는 사람들이 거대한 대중 투쟁에 나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이 개헌 의제를 뜯금없이 꺼내든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촛불행동이 옳게 비판했듯이, 지금 국면에서 개헌 추진과 윤석열 탄핵 추진은 모순된다.

진보당 · 정의당 · 민주노총 등의 지도자들은 민주당의 비밀관성과 기회주의를 비판하지 않고 있다. 대중 동원에도 만만찮게 나서지 않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는 좌파가 계속되는 존재감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윤석열의 군국주의는 군 수뇌부를 감싸고, 평범한 사병들을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

잇따른 훈련병 사망 사고는 군국주의 강화 때문

최근 육군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충격적 사고들이 일어났다.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소 9일 차인 훈련병이 40킬로그램 완전 군장을 하고 가혹 열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25일 사망했다. 그 나흘 전(21일)에는 충남 세종시 육군 제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실전용 수류탄으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실수로 훈련병이 사망하고 교관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들은 정부와 군의 권력자들이 강제 징집된 평범한 사병들의 안전과 생명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보여 준다.

국가는 스무살 남짓한 평범한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는 그저 죽음을 불사하고 적을 살상하라는 명령에 따를 도구로만 여긴다. 그에 걸맞게 상명하복하고, 살상에 적합하게 훈육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군 안전사고는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기도 힘들다.

따라서 이런 사고들은 그 본질이 채수근해병사망사고와 다를바 없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를 제외하면 야당들은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윤석열 책임으로(법적으로) 직결되지 않는 사건

이라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계급 문제로 보지도 않는 듯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혹행위 사망 사고를 언급하긴 했지만, 채 해병 사고만큼 열의는 없다.

진보당은 “군이 장병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비판 논평을 한 차례 냈지만, 채 해병 특검 관련 논평을 하루에 두 번 씩도 내는 것과는 비교된다. 정의당은 논평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의 성격과 그 맥락을 보면 윤석열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군기 강화의 지정학적 맥락

미 · 중 갈등 격화로 안보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집권한 윤석열은 대내외 안보를 강조하며 군국주의를 강화해 왔다.

그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실도 청와대에서 국방부 건물로 옮겼다. 윤석열은 채 해병 사망 사건에서도 군 수뇌부(에 속한 지휘관) 보호를 더 우선시했다.

반대로 사병들에게는 강한 훈련과 정신 무장을 강조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국군의날에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

▶ 3면으로 이어짐

대통령실 의혹이 아니라 대통령 의혹으로

대중 항의가 벌어지고 윤석열의 지지율 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과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이 수사 외압 시기에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폭로됐다. 그동안 둘 모두 이를 부인해 왔다.

의심이 사실로 바뀌고,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자 그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은 사실무근이고 자신들은 수사 외압과 무관하

다던 대통령실이 말을 바꿨다. 윤석열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얼마든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정당한 지휘권 행사 사실을 부인하고 지시 내용을 감췄을까?

채 해병과 박정훈 대령은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속죄양이다.

이제 해병대원 사망 관련 의혹은 ‘윤석열 게이트’가 돼 가고 있다.

바이든의 휴전 제안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시인한 셈

그러나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을 수락하게 만들 계획은 빠져 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5월 31일 새 휴전안을 제시했다. “6주간 휴전”하면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모든 인구 밀집 지역”에서 철수하는 등 3단계 휴전안이다.

사실 바이든의 ‘새 제안’은 하마스가 지난 5월 초 수락한 협상안과 본질적으로 같다. 이스라엘은 그 협상안을 거부했다.

바이든은 이 ‘휴전안’이 “이스라엘이 새로 제안한 방안”이라고 포장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이를 받아들이면 이스라엘도 ‘예스’라고 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전 협상 성사의 책임을 또다시 하마스에게 떠넘긴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의 발표는 이스라엘 정부를 혼란에 빠뜨렸다. 바이든의 발표 전까지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보도가 나온다.

바이든의 발표 직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렇게 밝혔다. “전쟁 종식을 위한 이스라엘의 조건은 바뀐 게 없다. 하마스의 군사적 역량과 통치 능력 파괴, 인질 석방, 가자가 더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하마스의 역량에 대해 네타냐후와 다르게 말했다. “현 시점에서 하마스는 더는 또 다른 10월 7일의 공격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이 거세지 않았다면 바이든은 휴전을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이든의 발표로 이스라엘 정부의 내분은 더 첨예해졌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을 지원해 왔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베니 간츠 등 이스라엘의 일부 정치인들은 바이든의 제안을 지지했다. 지난 주 토요일 텔아비브 거리로 쏟아져 나온 10만 명의 시위대도 바이든의 휴전안을 수용하라고 네타냐후에 촉구했다.

그러나 이타마르 벤-그비르와 베잘렐 스모트리치 등 이스라엘의 극우 정치인들은, 바이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연정에서 탈퇴해 정부를 붕괴시키겠다고 네타냐후를 위협했다.

네타냐후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바람과 내각의 분열 사이에 끼여 있다.

하마스를 인정하는 협상은 네타냐후의 정치생명을 끝장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네타냐후는 하마스와 협상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압력도 받고 있다.

사실 바이든 정부도 하마스 ‘정부’를 결코 용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바이든의 발표에서 가자지구 통치의 주체라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다.

20퍼센트 미만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이 시작된 지 8개월이 다 돼 가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은 여전히 완강하게 싸우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하마스의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은 가자지구 남부 벳자림 통로에 있는 이스라엘군 본부를 폭격했다.

또, 이스라엘의 라파흐 공격에 대한 세계인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라파흐를 공격해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고, 이스라엘군이 ‘안전 지대’라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소개시킨 해안 지역도 포위하고, 그로 인해 식량·식수 등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근 경고가 잇달아 나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항의 행동이 분출했다.

이렇듯 가자 전쟁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바이든이 재선에서 패배할 공산도 커지고 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아랍계 미국인들(적전지의 부동산으로 여겨지는 유권자층이다) 사이에서 20퍼센트 미만의 지지를 받았다.

바이든이 ‘새 제안’을 발표한 날이 도널드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한 혐의 34건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마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자신이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하다.

하마스는 협상의 기준을 재확인했다: “항구적인 휴전, 가자지구에서의 완전한 철수, 재건, 실향민의 고향으로의 귀환, 진정한 포로 교환 협상 체결 등.”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할 의사가 없다. 이스라엘군은 바이든이 새 제안을 발표한 직후에 가자 전역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부레이지 난민촌에서 2명,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4명, 알자와이다 지역에서 7명이 사망했다. 또, 이스라엘군은 탱크와 포병을 이용해 라파흐를 공격했다.

바이든은 지난주 금요일 연설에서 “이제 전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어떻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휴전 협상 조건을 수용하게 만들지는 말하지 않았다. 반면 하마스가 이 제안의 조건을 수락한 뒤 어기면 이스라엘이 인종 학살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라파흐 공격이 “레드 라인”(한계선)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기와 자금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김인식

▶ 2면에서 이어짐

훈련에 매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발맞춰 국방부는 “[사병들의] ‘즉응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을 2024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런 기조는 징집된 사병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강요)이 가중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숙련된 사병들도 거

의 하지 않는 실전 수류탄 훈련을 훈련병에게 시킨 것이고, 신병교육대 입소 9일밖에 안 된 훈련병에게 공수부대나 견딜 법한 가혹 열차려를 ‘군기 훈련’ 명목으로 강요한 것이다. 2022년 12월에는 자대에 막 배치된 신병을 준비도 없이 곧바로 혹한기 훈련에 내몰았다가 신병이 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로서 훈련병들 사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이유다.

한편, 이 가혹 행위 지시의 근거가 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군기 훈련 규정이 신설된 것은 2019년 11월이다. 원인 모를 수류탄 폭발 사고들로 2015년 하반기에 중단됐던 훈련소 수류탄 훈련이 재개된 것은 2019년 3월이다.(원인 규명은 끝내 못한 채로 훈련이 재개됐다.)

북·미간 정상회담이 결렬돼 한반

도 정세가 갈등 국면으로 돌아선 것이 2019년 2월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군수뇌부는 곧바로 군기 강화 등 대응 조치들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을 윤석열이 더욱 확대·강화하고 있다.

제국주의 경쟁 시스템과 그것에서 비롯하는 군국주의는 평범한 청년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 체제 내 개혁노선은 이런 시스템 자체에 도전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노조 파업 정당하다

전국삼성전자노조가 6월 7일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들어간다.

조합원들이 단체로 연차를 사용해 하루 파업을 벌이는 것이다. 노조 지도부는 5월 29일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한 임금 결정, 투명한 성과급제, 휴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를 체계적으로 무시했다. 노조와 약속한 휴가제도 개선 약속을 어기고,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 회에서 임금을 결정·통보했다.

5월 28일 재개된 본교섭에서도 사측은 또다시 노조를 무시했다.

지난 4월 1일 조합원 300명과 함께 사측에 면담을 요구한 손우목 노조 위원장을 막아 세우고 밀어 넘어지게 만든 사측 인사 2명을 버젓이 교섭위원으로 참석시킨 것이다.

노조가 이들을 교섭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마저도 거절하고는 되레 노조의 태도를 문제 삼아 교섭장을 나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적반하장

사측의 이런 태도는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계속해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이에 저항하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 포고와 다름없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한 이유다.

지난해 영업적자를 이유로 사측이 초과이익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노



“노조 인정하라, 성과급 지급하라” 5월 24일 2차 단체행동

동자들의 전체 연봉은 30퍼센트 이상 삭감됐다. 올해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해 영업이익이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과급은 여전히 형편없을 듯하다.

반면 삼성전자 임원들은 지난해에도 퇴직금을 넉넉하게 챙겼고, 보수한도(등기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상한액)도 17퍼센트나 인상했다.

반도체 부문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노조를 무시하는 것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4월 17일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 앞에서 2000여 명이 모여 창사 첫 단체행동에

나선 데 이어, 5월 24일에는 서초사옥 앞에서 2500여 명이 2차 단체행동을 벌였다. 올해 들어 조합원도 3배가량 늘었다(현재 2만 8400명으로 전체 직원의 20퍼센트).

친사용자·보수 언론들은 노동조합을 연일 비난하고 나섰다.

최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려 했던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를 전하며, 노동자 투쟁이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위기는 노동자 탓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심화된 결과다(관련 기사 5면).

삼성전자가 HBM의 시장 주도권을 빼앗긴 것도 경영진의 경영 전략 탓이지 노동자 잘못이 아니다. 이현국 부위원장은 울분을 터트리며 이렇게 말했다.

“HBM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그게 왜 우리 잘못입니까? 김기남 고문이 HBM 다 맡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는 퇴직금 170억 원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뜻깊은 전진

고임금 노동자의 이기적인 파업이라는 것도 가당치 않다. 손우목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삼성의 많은 계열사들과 그 외 협력사들은 삼성전자의 임금 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든 계열사와 협력사들에게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삼성전자만의 처우 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및 협력사 나아가 국내 모든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첫 파업은 전체 노동운동에도 의미 있는 전진이다.

삼성전자노조는 6월 7일 하루 연가 파업을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계속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성과를 얻길 바란다.

신정환

전세 사기 특별법 — 미흡한 개정안조차 거부한 윤석열

5월 28일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은 하루도 안 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세 사기의 고통을 오롯이 홀로 짊어져야 하는 피해자들이 벌써 여덟 명이나 유명을 달리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이번에 거부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던 선구매·후회수가 일부 반영된 안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안은 아니었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 준다고

하지만 시세대로 평가해 지급하는 것이라 깡통전세에 거주 중인 다수 피해자들은 여전히 큰 손해를 봐야 한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경매를 할 경우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후순위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턱없이 적어서 최대 70퍼센트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날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미흡한 개정안조차 거부한 것이다. 전세 사기는 사적인 거래에서 생긴 사기 피해이므로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부실 부동산 PF에는 수십조 원의 혈세를 지원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주택

정책으로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형평성 운운하며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기업의 이윤만이 관심사이고, 서민과 노동계급의 주거권은 우선순위에 없는 것이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는 무려 1만 7000가구가 넘는다. 이것도 한 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피해 주체가 입증돼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지원이 너무 적다 보니 아예 피해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피

해자 수는 수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전, 수원 등 곳곳에서 집단 전세 사기 피해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진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면, 국회의 눈치를 보며 요구를 삭감함으로써 운동의 동력을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온전히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대중적인 운동을 크게 건설하는데 주안점을 뒀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더 개선된 대책을 위해 싸워야 한다.

서지애 전세 사기 피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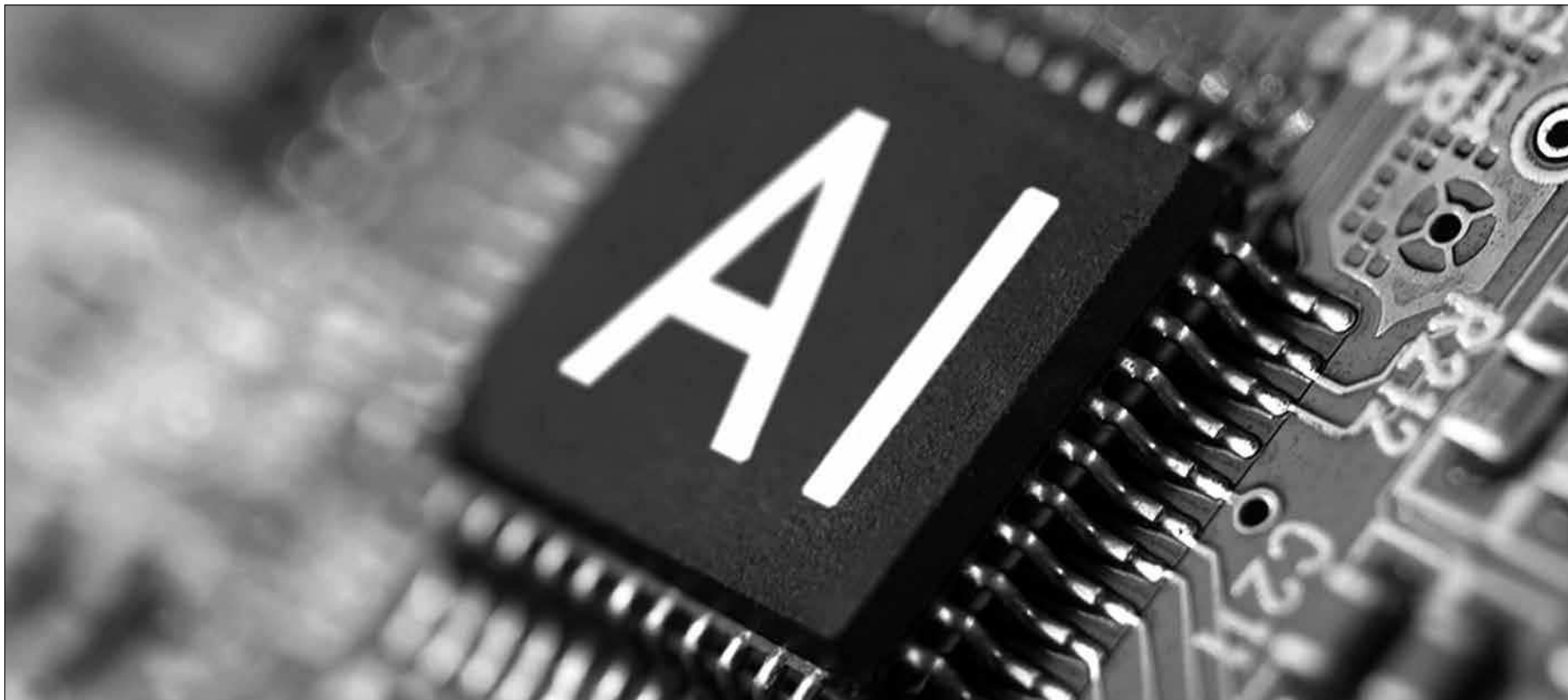


사진 출처 SKT

최근의 AI 투자 열풍이 닷컴 버블처럼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쟁 심화와 과잉 투자로 위험성 커지는 반도체 산업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분기 대비 1.3퍼센트 성장했다. 시장 예상치 0.6퍼센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2.1퍼센트)보다 크게 높인 2.5퍼센트로 수정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113억 8000만 달러(15조 7613억 원)로 지난해보다 54.5퍼센트나 증가하며 한국의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크게 좋아졌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는 매출 23조 1400억 원에 영업이익 1조 9100억 원, SK하이닉스는 매출 12조 4296억 원에 영업이익 2조 886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15조 원, SK하이닉스가 8조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에서 대규모 흑자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반도체 산업 호황이 거대 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증가에 따른 것이라, 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의 합종연횡과 각 기업들 사이의 경쟁 심화 또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경쟁 심화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은 엔비디아(NVIDIA)다. 몇 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주력으

로 설계해 판매하는 회사였다. 그러나 GPU의 데이터 처리 방식이 챗GPT 같은 거대언어모델 AI를 학습시키고 구동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엔비디아의 매출과 순이익이 대폭 증가했다.

엔비디아의 성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은 SK하이닉스이다.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에 한발 뒤지는 것으로 알려졌던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GPU와 짝을 이뤄 계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HBM(고대역폭메모리) 반도체의 개발에 앞장서 왔다. 지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등 최신 HBM 반도체의 점유율이 90퍼센트에 달한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9년에 HBM 팀을 해체해 최근의 AI 반도체 투자 열풍에서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HBM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HBM이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로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에서 탈락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AI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면서 2024년 AI 전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2024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액 5760억 달러(전망치)에서 10퍼센트가까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이 대폭 성장해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현재의 두 배인 1조 달러를 돌파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가 각광받고 있지만, 아마존·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거대 테크 기업들은 모두 자신들의 AI에 최적화된 반도체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반도체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맞춤 설계된 반도체를 사용하면 효율성을 더 높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면서 말이다.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줄어들면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며 큰 수익을 내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우위도 금방 사라질 수 있다.

반도체 기업들과 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주요국들의 경쟁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거품 우려

그런데 한편에선 AI 반도체 시장의 투자 거품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아마존·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트 같은 미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과 중국, 한국, 일본 등의 거대 기업들이 AI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막상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AI 활용에 큰 비용을 치르려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급증하고 있는 AI 반도체 수요가 2025년에는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처럼 AI 거품이 터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는 보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첨단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저조한 것이 시사적이다. 반도체 위탁제조업체 TSMC는 위탁 생산 성장 전망치를 낮추기도 했다.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강화되고 반도체 산업 부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기업들은 이윤 확보를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내는 시도를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탄력근무 확대나 임금 인상 억제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통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며 투쟁을 전진시켜야 노동자들의 생활수준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강동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러시아 본토 타격 금지’ 레드라인이 흐려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의 학살로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위험하게 치닫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고, 이는 러시아가 병력·탄환·공군력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덕분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러시아가 주되게 공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는 그간 맹렬한 폭격을 받아왔다.

이를 보며 유럽의 여러 정부들은 갈수록 공황에 빠졌다. 그들은 나토가 러시아에 더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갈수록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 중 발트해 연안 정부들이 가장 요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나라들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제2차세계대전 중 소련에 의해 침공·병합된 적이 있다.

BBC가 “에스토니아의 강철 총리”라고 부르는 카자 칼라스는 최근 러시아가 해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로 이런 발언들이 크렘린의 신경 증적인 망상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100만 명을 겨우 넘는 아주 작은 나라다. 반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권력이 훨씬 더 강력한 인물이다. 지난 2월 마크롱은 만약 키이우(키예프)가 함락될 듯이 보이면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로 파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병?

마크롱은 5월 초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분명한 전략적 목표가 있다. 그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긴다면 유럽의 안보는 사라질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출 것이라고 누가 감히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마크롱은, 나토 정부들한테서 제공받은 무기로 러시아 내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우크라이나 측의 요구도 지지했다.

나토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설정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받은 하이마스 다연장로켓으로 6월 2일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 라인의 하나였다. 그 선을 넘었다가는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교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레드라인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벌이는 대리전의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우도록 무기와 기술적 지원은 해 주지만 참전 자체는 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 세력들로, 각각 430억 유로와 100억 유로만큼 지원한 반면, 프랑스는 겨우 26.9억 유로만을 지원했다(킬 세계 경제 연구소). 4월 말 미 의회는 610억 달러어치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주 화요일(5월 28일) 마크롱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 군사기지를 우크라이나가 프랑스제 스칼프 순항미사일로 타격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후에는 바이든이 동조했다. 미국이 제공한 대포와 하이마스(HIMARS) 다연발 로켓포를 러시아에 “반격”할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다만, 하르키우 방어를 위한 것 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 영국과 독일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다시 한 번 핵 공격을 위협했고, 이번에는 유럽연합을 구체적으로 겨냥했다. “그들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 공격을

운운하기 전에, 자기 나라들이 작고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푸틴이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에 한 말이다.

바이든은 사거리가 더 길고 러시아 더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에이태컴스(ATACMS) 탄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막고 있다. 그러나 반복돼 온 패턴이 있다. 미국과 독일이 레드 라인을 설정하지만 (예컨대, 실패로 귀결됐던 우크라이나 공세에 원래는 탱크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후 압력에 떠밀려 그 선을 지키지 못하는 패턴이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크롱이 이번 주 후반에 있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일에 맞춰 나토 정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고문단 파견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보도했다. 그런 행동은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할 것이다. 서방 특수부대, 기술 자문단, 교관들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계속 약해진다면 서방 병력을 투입해 우크라이나를 떠받쳐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핵 전쟁 위험도 커질 것이다. 유럽연합은 약하고 분열돼 있고,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그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유럽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연합은 미국이 행동에 나서도록 등 떠미는 데에서는 성과를 내 왔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꼬리가 개를 흔들고 있는 형국[주객전도]이다. 쇠락하는 제국이 비틀거리면서 우리 모두를 아마겟돈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번역 김종환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캘리포니아대학교 노동자들,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 확대
- ★ 홍미정 <중동 현대사> 서평

화물 노동자 인터뷰

“운송료 삭감이 안전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구실을 했던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 종료된 이후 화물 노동자들은 큰 고통을 겪어 왔다. 임금이 크게 삭감됐고,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과로, 과적이 이어지며 사고도 증가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화물노동자가 10명에 달한다.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요구하며 화물연대는 6월 15일 2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할 예정이다.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치아가 다 빠졌어요”

이주봉 화물연대 부산지부 해운대지회장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예를 들어] 대한통운이 다른 운송사에 외주를 줄 때도, 그 운송사가 또 다른 운송사에 외주를 줄 때도 50만 원을 그대로 줬야 했어요. 아무리 하청에, 재하청이 이어지더라도 화물 기사들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안전운임제가 종료되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죠. 부산에서 대전을 갔다 올 때 76만~78만 원 받던 것을 지금은 63만 원만 받게 됐어요. 월 수익으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 떨어진 셈이죠.

차량 할부금, 지입료, 정비 비용 등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운송료가 이렇게 삭감되니 힘이 듭니다. 벌충을 해야 하는데 수출입 물량도 줄어서 일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16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했는데 지금은 5일만 일해요.

저는 부산에서 대전을 가는데요. 운전 거리만 계산하면 편도 4시간인데 컨테이너 부두에서도 화물 기사들에게 횡포를 부려서 운전 외에도 할 일이 많아요. 차량 세워 둘 시간도 없어서 운전하면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해요.

온몸에 쓰레기

컨테이너 청소도 화물 기사들이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온몸에 쓰레기를 뒤집어써요.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휴식도 제대로 취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2시간 운전하면 15분을 쉬어야 하지만 쉴 시간도, 쉴 곳도 없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땅이 없다며 안 만들어 줘요.

화물 기사들이 타이어 교체와 정비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송료 삭감이 안전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두 달 전 고속도로에서 냉동 컨테이너 타이어가 빠져서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 기사와 승객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정부는 화물 기사들이 타이어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단속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주면 누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질 때까지 쓸까요? 1년마다 하는 타이어 교체 비용만 600만~900만 원이 들어가요. 정비 횟수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운송료를 벌충하려고 과적을 하는 것이 타이어에 더 무리를 줍니다. 도로도 파손되고 브레이크 제동 거리도 길어져서 위험하죠.

그런데 과적을 안 할 수 있을까요? 화물기사가 적정 중량만 싣겠다고 하면 운송사에서 “재는 사무실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 배차를 빼고 압박을 줘요.

그나마도 부대조항으로 과적 할증이 포함된 안전운임제가 폐지돼 과적을 해도 할증을 안 해 주는 곳까지 생기고 있어요.

작년에 화물노동자가 847명 사망했는데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될 거예요. 교통사고 사망자 70퍼센트가 화물 노동자들입니다.

쉬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하루 16시간을 일하다 보니 저는 최근 2년간 치아가 싹 다 빠졌어요.

[6월 15일 집회를 알리는]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고 비조합원이고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분위기예요.



2022년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울분이 쌓여 있습니다”

김종열 광주 카캐리어지회장

“저희는 그 동안 당했던 거에 대한 울분이 쌓여 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면서 운임이 많이 삭감됐어요. 저희 카캐리어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다른 부분은 일도 없다 보니까 솔직히 대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운송료가 30퍼센트 정도까지 깎였어요.

안전운임제하에서는 심야에 위험도가 높은 운송을 자제시키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심야나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20퍼센트 할증료를 줬었는데요.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시키는 거죠.

노동자들도 운임이 삭감되다 보니, 이제 심야든 뭐든 어쩔 수 없이 예전에 가져가던 만큼 가져가려면 더 많은 시간 일해야 되고요. 그래서 장시간 노동에 또다시 내몰리게 된 거죠.

대기료도 없어지다 보니까 대기를 엄청 시켜요. 원래 대기 2시간이 넘어서면 일정 금액을 주게끔 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저희 카캐리어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부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안전운임제를 근거로 해서 유가 연동제 등을 얻어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그게 아직

유지가 되고 있지만 [조직력이 약한 곳들에서는] 다 없어졌습니다.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죠. 물론 저희가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번에 집회 참가를 위해 서울에] 올라가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 표출로 가시는 분들도 많죠.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 하겠다고 해 놓고는 마지막에는 폐기시켰어요. 저희에게 계속 희망고문을 한 거죠.

사실 2022년 11월 파업은 상식적으로 타이밍이 말이 안 되게 들어갔어요. 민주당이 안전운임제를 해 줄 거라고 지도부가 믿었기 때문에 파업 타이밍을 많이 놓친 거예요. 저는 민주당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 15일 집회는 윤석열 정권한테 반격하는 날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조직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2022년 5월에 1만 명이 넘게 모였었는데, 그때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도 애초 계획보다 버스 두 대가 추가로 더 올라갑니다.

우리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한 곳에 모이면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백선희·안우준

유엔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원웅·최일봉

최일봉이 1991년에 쓴 글을 이원웅이 업데이트하다

비록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했지만 팔레스타인의 국제연합(이하 “유엔”) 정회원국 가입 표결 사건은 유엔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안에도 적지 않음을 보여 줬다.

물론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이 그것을 막는 데에 무력하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다. 그전에도 이스라엘은 숱한 유엔 결의안들을 무시해왔고 미국은 그런 이스라엘을 두둔해 왔다.

그러나 세계 평화라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개혁할 수 있다면 유엔은 좋은 기구가 될 수 있다고 흔히 말한다. 유엔은 비판의 대상이면서도, 변화의 수단으로도 여겨진다.

가령 참여연대는 유엔 안보리 휴전 결의안 이행을 거듭 촉구하며 “유엔 등 국제사

회가 이 학살을 끝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도 5월 10일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정회원국인정 촉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 종식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을 리 없음을 고려하면 이런 어조는 온건한 지지자들을 고려하는 것일 게다.

물론 유엔에서 그런 결의안들이 통과되는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국제적 연대 운동의 효과이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더욱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엔을 찬양·고무하거나 이런 분위기에 타협하기에는 진실이 너무 엄연하다. 유엔이 단 한 번도 세계 평화라는 대의에 이바지한 적이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기구라는 것이다.



사진 출처: Basl D. Sour



사진 출처: UN Photo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휴전 촉구 결의안 통과 후에도 미국은 계속 이스라엘을 지원했다.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는 미국 대표(아래)

유엔의 창립 목적

유엔은 제2차세계대전의 승자들이 세운 제국주의적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창립됐다.

미국·영국·소련의 지도자들은 전쟁 중에 자신들을 “국제연합”으로 지칭했다.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자신들이 ‘해방시킨’ 인민들의 의사는 전혀 개되지 않고 세계를 분할하고자 했다. 일제 강점이 종식된 조선(한반도)도 그렇게 취급됐다.

당시 처칠은 전후 세계 분할 구상을 종이 한 장에 휘갈겨 적었다. 소련이 루마니아의 90퍼센트, 영국이 그리스의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양국이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를

공동 점유한다는 것이다. 처칠이 그 쪽지를 보여 주자 스탈린은 “파란색 연필을 집어들더니 크게 체크 표시를 하고는 도로 돌려줬다. 그것을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그것을 착안하는 데 걸린 시간과 같았다.”

미리 예상된 정확한 거래가 단지 한 장의 종잇조각으로 성사되는 그 과정은 수많은 인민의 운명을 결정한 연합국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인민들을 멸시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종전 무렵 미국 경제는 매우 강력해서,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좌우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는 것도 자연스런 일이었다.

유엔을 지배하는 자들

유엔은 주요 강대국의 통제하에 있도록 만들어졌다. 유엔의 진정한 실세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이다. 미국 외에 소련·영국·프랑스·중국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을 맡았다. 상임이사국들은 이사국 다수가 동의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번갈아 이사국이 될 수 있지만 거부권은 없다.

미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더 안보리 거부권 행사에 책임이 크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불리한 결의안을 거듭 반대해 왔다.

미국은 자신의 전략적 이익이 걸린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유엔에 개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해 왔다. 전 세계에 걸쳐 — 파나마·니카라과·그레나다·베트남·캄보디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 미국의 인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것이다.

안보리의 다른 상임이사국들도 미국처럼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유엔을 무시해 버릴 수 있다.

소련이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아프가니스탄·그루지야·아제르바이잔 등지에서 대중 저항을 탱크로 진압하고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짓밟고 있을 때 유엔은 아무 일도 안 했다. 1991년 걸프 전쟁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자, 거의 동시에 소련 관료

는 발트해 연안 국가 독립운동을 폭압적으로 진압하면서 미국의 공모를 뻔 뻘스럽게 얻었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체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때도 유엔은 인권에 관한 우려를 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경쟁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엔은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했다.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손도 결코 더 깨끗하지 못하다. 영국은 말라야와 키프로스, 아덴(예멘)에서 제국을 철수하면서 다시 돌아올 때의 길을 내는 셈치고 고문 같은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프랑스 제국도 베트남과 알제리에서 철수할 때 똑같은 짓을 했다. 아프리카의 프랑스 제국은 야만의 극치를 이루는 독재 정부의 형태를 취했다.

중국은 1989년 톈안먼 광장의 시위대를 탱크로 밀어버리고 발표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티베트인과 위구르인 등 자결권을 요구하는 소수 민족을 잔혹하게 탄압해 왔다.

요컨대 유엔이란 그저 두 가지 역할 가운데 하나를 행하도록 돼 있었다. 주요 강대국들이 합의를 보는 경우 유엔은 그들의 이익 추구를 정당화해 주는 깃발을 제공해 준다. 주요 강대국들이 분열돼 있으면 유엔은 마비된다.



2010년 아이티의 유엔군. 군사적 필요와 부유층 보호를 중시했고, 구호 활동에는 무능했다

사진 출처 Nicolas Joliet

유엔의 전과

유엔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부딪히지 않고 참전한 극히 드문 사례가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 때 미군은 유엔군으로서 개입했다. 한국전쟁은 소련이 표결에 기권한 채 벌어진 미국과 소련·중국의 제국주의 간 전쟁이었다. 미군은 15개국의 동맹들을 거느리고 유엔 깃발을 달고 왔다. 그때 ‘다국적’이라는 외피는 “유엔 사령관” 맥아더의 휘하에 200만 명이 넘는 미군에다가 구색 갖춘 국가들의 4만 군대를 덧붙이는 것으로써 유지됐다.

이후에도 유엔은 ‘평화 유지’라는 명분으로 민족 해방 투쟁을 약화시키거나, ‘감시’ 임무라는 미명하에 강대국의 이익에 따른 충돌을 방관·묵인하는 데 거듭 이용됐다. 예컨대 1960년 콩고가 독립했을 때, 콩고의 급진화를 우려한 미국은 그곳의 유엔군을 이용해 민족 운동 지도자 파트리스 루뮴바를 납치·살해했다.

다른 사례로 1969년 유엔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나미비아 점령이 불법이라고 선언해 놓고 1980년대 말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결국 나미비아인들이 자기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직

전에 이르자 유엔은 휴전을 감독한다며 군대를 파견했다. 유엔군은 나미비아 독립투사들을 무장 해제시켰고, 남아공 군대가 그들을 학살하는 것을 묵인했다. 물론 그것이 독립을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는 해방 운동의 일부를 분쇄하고 남아공 정부에 더 협조적인 나미비아 정부가 들어서는 데 일조했다.

방조의 패턴

유엔의 방조는 특히 중동에서 두드러졌다. 유엔의 최초 행동은 1947년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내놓은 것이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의 30퍼센트를 차지하던 유대인 정착자들은 팔레스타인 토지의 6퍼센트를 소유했다. 유엔은 이들과 팔레스타인인 모두를 위한 ‘정의’를 약속해 놓고 시온주의자들에게 토지의 55퍼센트를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온주의자들이 테러로 80만 팔레스타인인을 살던 곳에서 쫓아내고 팔레스타인 땅의 80퍼센트를 수용해 버렸을 때 유엔은 아무 일도 안 했다.

그후 유엔군은 1956년 이스라엘이

이집트 시나이반도를 침공한 뒤에 시나이반도에 주둔했고, 1967년 이스라엘이 주변국들과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철수했다. 그 뒤 1973년 전쟁 이후에 미국은 아랍 국가들의 석유 금수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고 유엔군을 다시 시나이반도에 주둔시키려 했다.

1978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뒤에 투입된 유엔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군을 레바논에서 철수시키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축출하고 현지 파시스트들을 동원해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할 때 유엔군은 슬며시 사라졌다. 2000년에 이스라엘군을 철군케 한 것은 결국 헤즈볼라였다.

냉전 후에도 유엔의 기능은 달라지지 않았다. 1991년 이라크를 상대로 한 미국의 걸프 전쟁은 유엔의 이름으로 치러졌다. 평화유지군도 서방의 영향력을 지키는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가 흔했다. 말리에서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행동한 그곳의 친프랑스 정부를 떠받치는 구실을 했다.

유엔의 개혁

유엔을 개혁할 수 있다는 기대는 그런 국제 기구가 제국주의 열강의 바람과는 다르게 구성될 수 없다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유엔은 그 구조와 목표, 자주 드러내는 무능으로 볼 때 제국주의의 산물로 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를

낳는 시스템의 일부인 것이다.

지난해 9월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유엔 의사 결정에 더 많은 국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유엔이 그렇게 개조된다고 해서 지금과 다르게 행동할 리는 만무하다. 앞서 언급한 콩고의 루뮴바 암살에는 스웨덴인과

아일랜드인 유엔 병사들이 가장 많이 연루됐고, 2004~2017년 아이티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을 주도한 것은 브라질이었다. 세계의 어느 지배계급도 자신의 국경선 내에서 결코 인자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들이 국경 밖에서는 인자할 것이라고 기대해야 할까?

국제연맹과 코민테른

국제공산당, 즉 코민테른 창립 대회는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을 “자본가들의 신성동맹”이며 “약탈과 착취와 제국주의 반혁명의 연합”이라고 묘사했다.

볼셰비키는 그런 기구들에 매우 적대적이어서, 그런 것들에 반대하는 것을 코민테른 가입 조건의 하나로 명시했다.

“코민테른에 소속되고자 하는 정당은 모두 사회해국주의[요즘 말로 좌파적 민족주의 — 이원웅]뿐 아니라 사회평화주의[요즘 말로 좌파적 평화주의]의 불성실성과 위선의 가면을 벗겨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러므로써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를 혁명으로 전복하지 않고는 국제 중재 법원 따위가, 군비 축소 회담 따위가, 국제연맹의 ‘민주적’ 개편 따위가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을 막을 수는 없으리라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유엔이란 그 회원국 모두가 손에 피를 묻힌 기관이다. 이자들의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대중적 항거이다.

유엔 외교가 아니라 현지의 저항과 대중적 항의 운동이 베트남 전쟁을 끝냈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과 식민 지배도 제국주의 질서에 맞선 노동자·빈민의 반란으로만 끝장낼 수 있다. 다른 어느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국제 재판소들은 왜 팔레스타인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5월 24일 라파흐 공격 중단을 “명령”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카림 칸이 5월 20일 네타냐후 등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지난 주 라파흐에서 팔레스타인인 피란민 66명을 학살했다.

ICJ가 가자지구의 휴전을 강제하지 못하고, ICC의 체포 영장이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를 구속시키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 국제 재판소들은 “국제 사회”(서구 열강)의 의지와 권력에 의존해 판결을 집행한다. 그리고 이 “국제 사회”는 중동의 팽방 이스라엘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할 의향이 없다.

미국 의회의 민주당 · 공화당 지도자들은 5월 31일 네타냐후를 상하원 합동 연설에 공식 초청했다! 네타냐후는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가장 많이 연설한 정치인이 될 예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두 국제 재판소들의 결정이 상징적 의미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과 연대 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갖는다. 국제 재판소들의 최근 움직임은 서방 지배자들이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은 이스라엘의 전투기와 탱크에 의해 찢어미가 된 가자지구에서 수개월째 영웅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며 투쟁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 대학생들의 점거 운동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바이든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대학 점거 농성장을 침탈하고 학생들을 체포했지만, 학생 운동을 분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 아무 의미도 없는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인정이나 서류상으로나 남아 있을 뿐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논의로는 이스라엘을 패퇴시킬 수 없다.

네타냐후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 제국주의 시스템에 도전해야 한다.

국제 재판소들의 임무는 전쟁과 인종 학살로부터 무고한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는커녕 서방 강대국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구실



최근 판결들은 서방 제국주의 지배 질서의 위기를 보여 주지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을 한다.

ICJ(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UN)의 주요 사법 기구이다(1945년 설립). 국가들의 위계적 관계를 반영하는 유엔에서 핵심 기구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 러시아 · 중국 · 영국 ·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에 직접 · 간접 책임이 있는 강대국들로 이뤄져 있다. 미국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이스라엘에 불리한 유엔 결의안들을 한결같이 막아 왔다.

서방 강대국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ICJ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5월 16일 요청을 수용해) 5월 24일 이스라엘에 라파흐 공격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명령”을 뒤집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ICJ가 자신의 “명령”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이 “명령”을 간단히 무시했고 백악관은 아무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ICC(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에 소속돼 있지 않은 “독립” 기관으로, 2002년 로마규정에 의해 설립된 상설 국제 재판소이다. ICC는 인종 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및 침략 범죄와 같은 국제 범죄로 개인을 소추할 수 있다.

2022년 현재 123개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 중국 · 러시아는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국의 대외 정책이 국제법에 의해 제약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 ICC의 설립 자체를 반대했다.

ICC는 옛 유고 전범재판소를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옛 유고 전범재판소는 1990년대 미국 · 나토 · 유럽연합의 발칸반도 개입을 합법화하기 위해 창설된 기구다.

옛 유고 전범재판소는 2006년 유고 슬라비아 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사망하자 “종료”됐다.

밀로셰비치는 스릅스카공화국(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세르비아계 자치 공화국) 대통령 라도반 카라지치와 함께 “발칸의 도살자”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 크로아티아인과 보스니아인을 학살한 전범이자 철권통치를 한 독재자였다.

밀로셰비치는 2000년 세르비아 항쟁으로 쫓겨난 뒤 옛 유고 전범재판소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받던 중 옥사했다.

카라지치는 1995년 스레브레니차에서 8000여 명의 무슬림들을 인종청소했고,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40일간 포위하고 포격해 1만여 명을 학살했다. 카라지치는 옛 유고 전범재판소에서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밀로셰비치와 카라지치가 옛 유고 전

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것은 그 둘이 옛 소련권 국가의 수반, 다시 말해 서방의 적성국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ICC도 그런 불문율을 따랐다. ICC는 지금까지 서방과 그 우방국 지도자를 기소 · 심리 · 구속한 적이 없다. ICC가 그동안 체포 영장을 발부한 인물은 전 리비아 국가원수 무아마르 카다피, 전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바시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었다.

네타냐후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미국의 동맹국 정상으로는 최초다.

그 때문에 ICC 검사장 카림 칸은 네타냐후 등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한 뒤 “한 고위 지도자”에게 꾸중을 들어야 했다. “ICC는 아프리카나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강패를 기소하려고 만든 기구[다.]”

카림 칸은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한 체포 영장도 청구해 균형을 맞췄다. 하마스는 서방 국가들에 의해 ‘테러 단체’로 지정돼 있고 그 지도자들은 상시적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ICC의 체포 영장 청구는 서방 제국주의가 사실상 통제하는 국제기구로까지 위기가 번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바이든이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터무니없다. ...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미국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카림 칸 검사장을 제재하겠다고 협박했다. “의회는 그들이 더 나간다면 국제형사재판소와 그 지도부를 벌하기 위해 제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침묵했다. 아마 서방 국가들이 이 사안을 두고 분열했기 때문인 듯하다. 민주당은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을 규탄한 뒤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도통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스라엘과 서방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정당 이 전혀 아니다.

그러나 가자지구 대량 학살의 책임은 하마스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 등 서방)에 있다. 3만 6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가자지구를 초토화해 버린 가자 전쟁은,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을 핑계로 삼은 계획적 인종청소다.

김인식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스라엘 점령의 부역자다 (PA)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친구'를 자처해 온 노르웨이를 비롯해 스페인·아일랜드가 최근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했다. 슬로베니아와 몰타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서방 지배자들이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이스라엘에 부여하는 팔레스타인 당국(PA)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 부여에 주의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1993년 오슬로 협정의 산물이다. 1987년 1차 인티파다의 영향으로 다른 아랍 국가들로 저항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은 저항을 가라앉히려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대화를 시작했다.

PLO를 이끌던 야세르 아라파트는 인티파다를 통해 얻은 기회를 허비해 버리고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역사적 후퇴를 했다. 그 보상으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일부를 관할할 팔레스타인 당국이 세워졌다.

그러나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신규 정착촌 건설은 오슬로 협정 이후 더욱 가속됐다. 1992~2000년 정착촌 인구가 갑절이 됐다. 이스라엘은 점령지 출입을 계속 통제하고, 이스라엘 군경과 정착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고 살해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는 이스라엘 상품 판매처와 저렴한 노동력 공급처로 이스라엘 경제에 종속됐다.

“상징적 숫자”

‘평화 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분노로 2000년 제2차 인티파다가 분출했다. 이런 저항을 단속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당국의 주요 임무였다.

2011년에 파타와 이스라엘의 1999~2010년 협상 내용이 담긴 팔레스타인 당국 비밀 문건 1600개 이상이 <알자지라>에 유출됐다. 협상에서 파타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통치권과 불법 정착촌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인 난민의 귀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징적 숫자”의 난민 귀환과 비무장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생 관계 1993년 백악관 잔디밭에서 오슬로 협정에 조인하는 아라파트와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라빈

협상에서 하마스의 저항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이스라엘 보안군과 팔레스타인 당국 간의 비밀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011년 아랍 혁명이 일어나자, 팔레스타인 당국 수반인 마무드 압바스는 이집트 독재자 무바라크와 튀니지 독재자 벤 알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팔레스타인 당국의 임시 수도 라말라에서 아랍 혁명들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압바스는 경찰에 시위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2021년 5월 단결 인티파다가 벌어지자 팔레스타인 당국은 미국·이스라엘과 협상하기를 바랐고, 이런 행태를 비판하거나 저항을 더 밀어붙이려는 활동가들을 탄압했다. 그중 한 명인 나자르 바나트가 구금 중에 경찰의 구타로 숨진 것으로 알려지자 6월 라말라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팔레스타인 당국 보안군은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지난해 10월 7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인종청소와 팔레스타인 당국의 침묵에 대한 분노로 10월 17일 라말라 중심가에서 압바스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팔레스타인 당국 보안군은 최루탄과 연막탄으로 시위대를 공격했고, 제헌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보안군의 공격으로 12살 여아 라잔 나스랄라가 사망했다.

6월 2일 <알자지라>는 서안지구에서 새로운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이 늘고 있고, 여기에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파타 지지자들도 참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확대

되는 이스라엘의 점령과, 팔레스타인 당국에 대한 환멸 때문이다.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스라엘의 보조자로 여겨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정치적 억압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 대다수 팔레스타인 민중의 생활수준을 악화시켰다. 2007년 총리로 임명된 파야드는 1990년대에 팔레스타인 당국으로 파견된 국제통화기금(IMF) 측 대표였다. 그는 세계은행과 함께 계획한 급속한 시장화를 추진했다.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정착촌의 모습을 본떠 카타르 투기꾼들의 자금으로 건설된 고급 주택단지가 강제수용 법안에 따라 몰수한 촌락의 토지 위에 지어졌다. 서안지구 농부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국은 함께 공단을 만들고, 규제 없이 쓸 수 있는 팔레스타인인 노동력을 미끼 삼아 걸프 연안국 등에 투자를 호소했다. 거기서 제조한 상품들은 아랍 세계에 쉽게 접근하려고 ‘메이드 인 팔레스타인’ 딱지를 붙여 수출했다.

2012년 팔레스타인의 실업률은 27퍼센트에 달했고, 실질임금은 2006년 대비 10퍼센트나 낮았다. 반면 고위 관료들은 막대한 부를 모았다. 가자지구 보안기관을 지휘했던 무함마드 다흐란은 오슬로 협정 이후 10년도 안 돼 개인 자산이 1억 2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당국, 팔레스타인인 자본가들이 걸프 연안국 자본가들과 결탁해 대다수 팔레스타인인들에 맞서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제국주의와의 야합을 통해 부패의 고리를 형성했다.

부패한 파타를 몰아내고 다른 세력이 팔레스타인 당국을 이끌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2006년 팔레스타인 의회 선거에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당국을 주도하는 파타를 누르고 승리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주로 파타가 장악한 팔레스타인 당국의 보안기관들이 가자지구에서 쿠데타를 기도했다. 하마스가 이를 제압하자,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가담했다. 가자지구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고, 가자지구로 가는 전기를 끊었다.

이런 팔레스타인 당국을 ‘국제 사회’가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발판 삼아 온전한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허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당국을 이용해 저항을 억누르려 한다. 이에 맞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연대하는 국제적 운동을 성장시켜, 중동 제국주의 질서의 일부인 아랍 국가들에서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고무해야 한다.

임준형



남아공 총선

만델라의 정당 ANC가 심판받다

아파트헤이트 종식 이후 최초로 단독 집권 불가능

찰리 김버

5월 29일(현지 시각) 실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 중간 개표 결과 Nelson Mandela의 정당이었던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사상 처음으로 과반 득표에 미달했다.

개표가 거의 끝난 6월 1일 토요일 현재 ANC의 전국 득표율은 40퍼센트다. 지난 2019년 총선 때보다 15퍼센트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이다. 남아공 정부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대한 국제 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면 득표는 더 줄었을 것이다.

친기업 정당인 민주동맹이 약 22퍼센트를 득표해 2위를 기록했다. 민주동맹은 흑인 중간계급과 백인 상당수에 게 지지를 받았다.

애초에 ANC는 아파트헤이트(1948~1994년에 남아공에 존재했던 지독히 인종차별적인 체제) 종식에서 떨어진 명성과, ANC 지도자 Nelson Mandela의 명망을 이용해 득을 봤었다.

이후 30년 동안 ANC의 득표는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언제나 과반을 차지했다. 아파트헤이트 종식 후 첫 선거였던 1994년 총선에서 ANC는 62.5퍼센트를 득표했다. ANC 득표율은 1999년에 66.4퍼센트로 오르고, 2004년에는 70퍼센트 가까이 이르렀다. 그 후 득표가 줄기 시작해, 2009년

66퍼센트, 2014년 62퍼센트, 2019년 57.5퍼센트를 기록했다.

이제 ANC는 연립 정부를 구성할 파트너를 하나 이상 찾아야 한다.

5년 전, 현 대통령 Cyril Ramaphosa는 만연한 부패를 일소하고 여당 ANC를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부패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흑인 대다수의 처지는 더 나빠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판자집에서 산다. 국가는 그들이 거주 허가를 받지 못한 곳에서 산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다 쓰러져 가는 판자집을 철거해 버린다. 하루에 열 시간씩 정전이 일어나기 일쑤다. 공식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대비 3분의 1로 굳어져 있지만 실제 수치는 이보다 높다.

전 대통령 Jacob Zuma의 신당 '국민의 창(MK)'이 ANC의 표 일부를 가져갔다. 금요일 밤 현재 MK의 중간 득표율은 약 13퍼센트다.

Zuma는 자신이 ANC보다 더 급진적이라고 주장하지만, Zuma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정부 이권 분배 방식을 바꿔 자기 파벌과, 특히 자기 출신지인 콰줄루나탈주(州)를 부유하게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지난 30년간 남아공에서 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파트헤이트가 종식된 방식 때문이다.

아파트헤이트는 ANC와 대기업들

의 타협으로 종식됐다. 노동자 투쟁이 분출하고 강력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흑인 거주지에서 봉기가 계속 벌어져 아파트헤이트를 위협했다. 이 투쟁들은 남아공에서 자본주의 그 자체를 타격할 길을 열기도 했다.

대기업 일부와 백인 기성 권력자들은 모든 것을 잃느니 흑인 야권과 타협을 맺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다. 이 타협은 양측 모두가 상당한 양보를 한 덕에 가능했다. 이후 ANC는 기업에 대한 공격을 일절 꺼리게 됐다.

ANC와 대기업들의 타협

물론 1994년 이후 변화가 있긴 했지만, 결코 충분치 않았다. 그리고 진정한 경제적 권력은 여전히 아파트헤이트 시절 권세를 누리던 바로 그 기업들의 손에 있었다. 극소수 흑인 엘리트층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부유해졌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 중 하나인 남아공에서 말이다.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부의 86퍼센트를 소유하고, 상위 0.1퍼센트가 소유한 부가 전체 부의 3분의 1에 이른다. 자산분배율 최상위 0.01퍼센트에 속한 3500명에게 남아공 전체 가구순자산의 15퍼센트가 집중돼 있는데, 이는 하위 90퍼센트의 가구순자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은 것이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반동적인 외국인 혐오 요구로 이끌릴 수 있다. 이번 주에 좌파 분석가 Deil Mackinlay는 이번 선거의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우익의 부상"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썼다.

맥킨레이는 이렇게 썼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벌어져 온 일이 남아공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남아공의 선거 지형이 점차 우경화하는 것이다."

"[극우 정당인] 애국동맹(PA)의 증오로 가득 찬 욕설과 '외국인'에 대한 폭행 위협이든, '법질서'에 입각해 국경 통제를 부르짖는 민주동맹이든, 이민 체제에 깊이 뿌리 박힌 부패와 냉소와 통치 무능을 정치 개혁이라는 포장으로 감춘 ANC든 마찬가지이다."

"2024년 선거 판세에서 '외국인들'(특히 가난한 아프리카 출신자들) 희생양 삼기가 점점 더 인기 있는 정치적 스포츠'가 되고 있다."

맥킨레이는 이렇게 비판했다. "과거를 신화화하기, '문화'를 이용해 먹기, 가부장제와 여성 혐오 그리고 세상의 무자비함에 대한 찬미(다시금) 흠뻑 수용하기. 이것이 남아공을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인 길로 내몰려 하는 슬프지만 냉혹한 현실이다."

이런 요소들은 진정한 좌파적 정치가 필요함을 뚜렷이 보여 준다.

남아공 경제는 여전히 백인 정착민들이 지배한다

'아바탈리 바셈존돌로[판자촌 사람들]'는 회원 수가 15만 명에 이르는 남아공 최대 기층 단체 중 하나다. 이 단체는 노동자·빈민에 초점을 맞추고, 토지 점거 운동을 지지하며, 흑인 거주구 및 빈민가 사람들의 조건 개선 쟁취 투쟁을 지원한다.

오랜 시간에 걸친 단체 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아바탈리는 총선 투표 방침을 경제자유투사당(EFF) 지지로 정했다.

줄리우스 말레마가 이끄는 EFF는

좌파적 공약을 내걸었다. "오늘날 남아공 경제는 여전히 소수의 백인 정착자들이 통제한다."

"1994년 정치적 변화는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그것은 흑인들을 경제적·사회적 아파트헤이트에 계속 종속시키려는 사기극이었다."

EFF의 핵심 공약은 광산·은행을 비롯한 핵심 경제 부문에 대한 무상 국유화였다. 그러나 EFF는 자신이 선호하는 "애국적" 자본 부문에 대해서는

타협을 했다.

29일 금요일 오후 현재 EFF의 득표율은 약 10퍼센트다.

아바탈리는 이렇게 밝혔다. "우리 단체가 설립된 지 19년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채워진 빈곤·치욕·탄압의 족쇄에서 해방되기 위해 투쟁해 왔다."

"ANC는 2013년 이래로 우리 지도자들을 살해하고 있다. 2022년에 우리 지도자 세 명이 암살당했고, 또 다른 한 명이 경찰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 따라

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은 '탄압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ANC에 보내는 것이고, 바라건대 아예 ANC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다."

"신당 MK는 ANC의 잔가지에 불과하다. ANC 최악의 인물·파벌 몇몇이 '국민의 창'에 있다."

"우리는 대중 민주주의 권력을 수립해 아래로부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헌신하는 사회주의 조직이다. 그

▶ 13면으로 이어짐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⑤

자본주의는 어떻게 자연을 망가뜨리는가?

인간으로서 우리는 주변의 자연 세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이 체제는 그 관계를 뒤틀어 놓는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은 자연 세계로부터 분리돼 있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우리는 주변 세계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다. 좀 더 신중한 체제라면, 지구를 보호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우리를 인간이도록 해 주는 본질을 박탈당한다. 그 본질이란 바로 주변 자연 세계를 집단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이다. 우리는 삶의 통제권을 빼앗기고 우리 노동의 생산물을 스스로 만끽할 수도 없다.

우리는 노동 생산물, 노동과정, 인간 본성 그리고 동료 인간으로부터 소외된다. 또한 노동으로 자연을 변화시키는 능동성에서 멀어진다. 그러나 모든 인간 사회의 토대는 자연 세계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으로 자연과 인간 자신을 변화시키는 복합적 과정을 설명하려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노동은 그 무엇보다도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벌어지는 과정이고, 인간이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 그 자신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를 매개·규제·통제하는 과정이다” 하고 마르크스는 썼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

마르크스는 이런 분석에 기초해서 자본주의에서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인간과 자연 사이 “신진대사의 균열”이 있어 그런 농업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그런 신진대사 균열을 해결할 방법은 사회 조직 방식을 바꿔 사람들과 자



온실가스 배출이 여전한 것은 이 체제의 지배자들이 뒤틀린 인간-자연 관계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연의 관계를 바꾸는 것뿐이다.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사회 조직 방식이 그 이전 시대와 급격하게 바뀌어야 했다.

자본주의 이전 유럽에서는 봉건제가 지배적인 사회 조직 방식이었다. 당시 농노들이 일해서 생산된 것의 압도 다수는 영주 자신의 소비를 위해 쓰였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이 생존하려면 일할 능력(노동력)을 팔아야만 한다. 서로 경쟁하는 여러 기업들에 의해 생산이 조직된다. 모든 기업은 경쟁자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또한 경쟁자에게 뒤쳐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새로운 기술을 도

입하는 목적은 오직 이윤을 극대화해서 이런 경쟁에서 이기는 것뿐이다.

이렇듯 자본주의에서는 부의 축적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렇게 부를 축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자본주의에서는 자연 세계와 맺는 관계가 그 이전 시대와 매우 다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처음으로 자연은 그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순전히 유용성을 위한 것이 됐다. 자연이 자체적으로 권능을 갖는다는 인식은 사라졌다. 자연의 내부

법칙을 이론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자연을 (소비 대상이나 생산 수단으로서) 인간의 욕구 아래에 두기 위한 간계(奸計)에 지나지 않게 됐다.”

자본주의는 자연환경을, 이윤을 얻으려고 이용해야 할 대상이나 원치 않는 부산물을 내다 버릴 공간으로만 취급한다. 이윤 창출을 위한 속도 경쟁 속에서 단기적 고려 사항이 가장 중시된다. 설령 그 탓에 장기적으로는 지구 전체가 위험해지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더라도 말이다.

비합리적, 무계획적, 숭한 낭비

더 지속 가능한 방식에 투자하거나 윤리를 더 중시하려는 기업은 경쟁자들에 비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언제나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아무도 생산 전체를 관장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생산은 비합리적이고 무계획적이고 모든 층위에서 낭비가 생겨난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과잉생산이, 다른 한편에서는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현재의 선진국들이 발전해 온 과정은 이렇게 지속 불가능하고 파괴적이었지만 모든 발전이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체제 전체의 관점에서 또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것도 그 체제의 일부로서 서로 경쟁하는 이들에게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 균열을 해결한 사회를 이뤄야만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재의 다섯 번째 글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지구를 구하려면 체제를 전복해야만 하는 이유에 관해 다룰 것이다.

▶ 12면에서 이어짐

러나 현재 출마한 정당들 중 좌파 정당이 없으므로 특정 정당의 강령을 위해 투표할 수도, 그 정당이 민중과 진보 원칙에 충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표할 수도 없다.

“우리 핵심 원칙 중 다수는 투표로 이룰 수 없다. 예컨대 모든 토지를 상품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공직자 소환권 확립 같은 것들이 그렇다.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운동을 조직하고, 빼앗긴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해

왔다. 우리는 거리에서, 언론을 통해, 협상장에서, 법정에서 투쟁을 벌여왔다.

“아래로부터 대중 민주주의 권력을 창출하고 전국에 코뮌을 건설하고 세계적 운동들의 일부가 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핵심 토대임은 변함이 없지만, 2006년 이래 우리는 모든 정치 정당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차례 선거에 전술적 개입을 해 왔다.

“아바랄리는 2024년 총선에서 EFF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아바랄리는 EFF에 가입하지도, 무비판적 지지를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전술적 투표다.

“아바랄리는 아바랄리로 남을 것이며, 독립성을 계속 유지하고 민중 운동으로 남을 것이다. 5월 29일에 우리는 투표장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5월 30일에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019년에 남아공 최대 노동조합 금속노조(Numsa)는 사회주의혁명노동자당을 창당했다. 금속노조는 2012년 마리카나 광산에서 파업 중이던 흑인 광원들이 경찰에 학살된 일의 여파 속

에서 창당을 결정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ANC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데에 너무 급했고, 그렇게 세운 정당이 투쟁을 위한 당인지 선거 승리를 위한 당인지도 불분명했다. 결국 금속노조의 신당은 투쟁에도 효과적이지 못했고 득표도 매우 저조했다.

이번에 금속노조는 후보를 내지도 지지 정당을 밝히지도 않았고, 우익 세력에 대한 경고를 표하는 데에 그쳤다.

출처 Charlie Kimber, 'Voters punish ruling ANC in South African election' (2024. 5. 31) / 번역 김준호

상치로 근무한 기간제교사의 경력은 교원경력이 아니다? (상치는 자기 교사 자격과 다른 교과를 맡는 경우)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우리도 교사입니다) 저자

5월 29일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 제1청사 앞에서 '기간제 사서교사 임금환수대책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기간제 사서교사 교육경력 불인정 및 임금 환수 감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얼마 전 감사원은 교육청 정기감사 중에 사서교사로 근무한 기간제 사서교사의 경력은 교원 경력이 아니므로 호봉 재산정을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5월 2일 각 학교에 발송된 공문은 기간제 사서교사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사서교사로서 학교 도서관을 살리고 독서교육에 매진했던 지난 5년의 교원 경력을 깎그리 부정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2019년에 모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시 교육청은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다며 사서교사의 자격을 완화해 유초중등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 중 사서 자격증이 있는 경우 사서교사로 임용했다.

교육청은 이들 사서교사의 경력 인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학교급이 다른 경우만 80퍼센트를 인정하고 학교급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인정하겠다고 했다. 즉,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으로 중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80퍼센트이지만 초등학교에 근무하면



교육청의 '취업 사기' 경력 불인정과 임금 환수 시도에 항의하는 기간제 사서교사들

100퍼센트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이라며 2024년 3월부터는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는 기간제교사를 학교 도서관에 근무할 수 없게 했다(2023년 6월 발표).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기간제 사서교사를 하루아침에 해고해 버린 것이다. 게다가 이제 호봉을 재산정해 임금을 삭감하고 환수하겠다고 기간제교사들은 기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규탄대회에 참가한 한 기간제 사서교사는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오십의 나이에 대학원을 다니다 갑상샘암에 걸렸다. 당장 수술하라는 의사의 권고도 뿌리치고 대학원 학기를 마치는 12월 이후로 수술을 미뤘다고 한다.

그렇게 어렵게 취득한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사서교사로 근무한 지 1년 반이 된 시점에서 더는 사서교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됐다. 이 교사는 사서교사

가 되기 위해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느냐고 눈물지었다.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1, 2차 채용공고에는 지원할 수도 없다. 채용이 되지 않아 3차 공고가 나간 뒤에야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떤 교사는 17차 공고를 보고 지원해 근무했다고 한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기피 지역이거나 낙후 지역인 경우가 많다.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사서교사에게 필요한 연수를 듣고 독서교육 연구도 하는 등 사서교사로서의 능력을 배가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교사로서의 근무가 아니라고 한다. 해당 교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교육청으로부터 '사기 취업'을 당한 것이냐고 일갈했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교사 자격과 다른 교과(비교과 포함)를 맡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학교에서는 '상치교사'라고 한다. 국어교사가 한문 수업을 하거나 국사교사가 지리를 수업하는 경우 등이다. 상치교사는 매우 오래된 관행이다.

지난해 김영호 의원실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지난 3년간 상치교사로 근무한 교사는 전국에 8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의 근무 경력을 교원 경력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다.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는 해당 교사자격증과 동일한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 유사 교과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들도 엄격하게 따지면 자신의 자격증과 달리 임용돼 근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교원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상치교사나 유사교과 교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학교에 필요한 교원을 충분히 임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10년 전부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규 교원을 감축하고 있다.

교육청이 이들 상치교사를 모두 문제 삼아 임금을 삭감하고 환수하려는 것인가? 결코 아닐 것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사서교사의 근무 경력을 교원 경력으로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임금 삭감과 임금 환수도 집행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제 사서교사의 대응은 달라질 것이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엘코리아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46-16 4층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영상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61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독자 편지

wspaper@ws.or.kr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동참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한국 초중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성장하고 있다.

필자가 포함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교사들'(이하 팔연교)은 매주 광화문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참가는 물론이고, 노동조합 등에서 팔레스타인인 초청 특강, 팔레스타인인 연대 수업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팔연교는 현재 전국 12개 지역에서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90여 명이 함께 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스라엘 인종 학살에 맞선 세계적인 항의 집회가 있었던 2월 17일, 교사들은 서울 도심에서 열린 '국제행동의 날 대행진' 집회에 참가해 "아이들을 죽이지 마라!" "이스라엘은 인종학살 멈춰라!"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행진해 큰 환영을 받았다. 이날 국제행동에 고무받은 교사들이 교사 내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성에 공감했고 곧이어 팔연교를 결성했다.

그 전인 올해 1월, 몇몇 교사들이 전교조 주최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서 팔레스타인인 유학생과 중동 전문가 초청 강연을 열었는데, 당시 강연에 참가한 사람들이 팔연교 결성에서 주축이 됐다.

팔연교 소속 전교조 조합원들은 "전교조의 팔레스타인 연대 동참"을 호소하며 지난 2월 전국대의원대회에 '팔레스타인 연대 사업'을 추가한 수정안과 '팔레스타인 연대 특별결의문'을 제출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4~5월에 전교조 인천·경기·전남 지부가 각각 팔레스타인 연대 특강을 개최했다. 이 특강에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당시가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을 앞둔 시점이라 교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각 강연마다 교사 20~40명이 참가했고, 젊은 교사들의 참석이 두드러졌다. 수원 특강에는 화성, 오산, 안양, 성남, 용인, 시흥, 부천, 하남 등 경기 곳곳에서 교사들이 왔다.

각 강연에서는 팔레스타인인 유학생인 나리만 씨와 톨라 씨 등이 팔레스타인에서 직접 경험한 점령하의 고통과 참상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주류 언론이 외면해 온 진실을 알게 된 참가자들은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또 다른 발제자였던 중동 전문가 박이랑 씨와 이정구 씨도 시운주의와 이



팔레스타인 연대 수업에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위) / 5월 25일 전교조 주최 전국교사대회에서 벌인 팔레스타인 연대 캠페인(아래)

스라엘 국가의 성격, 이스라엘 비판이 유대인 혐오가 아닌 이유 등의 쟁점을 역사적 맥락과 함께 쉽게 설명해 호평을 받았다.

강연장에 전시된 사진과 유인물을 본 교사들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후원에도 동참했다. 이 특강들로 교사 20여 명이 팔연교에 새롭게 가입했다.

전남 서남권(목포, 무안, 함평 등)에서 특강이 진행된 후, 여수, 순천, 나주 등 전남 동부권과 중부권도 팔레스타인 연

대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경남 산청과 강원 원주·횡성에서도 특강을 주최해 보려는 교사들이 생겼다.

경기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 대상 특강을 할 수 있는지 팔연교에 문의해 오기도 했다.

팔연교 교사들은 각 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수업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수업에는 학생·교사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전남 무안의 한 혁신학교에서는 중학교 2학년 전교생 230여 명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과 팔레스타인인 초청 특강을 진행했는데, 이 학교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연대 메시지가 팔레스타인 현지 매체 <슈아뉴스>에 실렸다.

최근 인천에서는 고등학교 3곳에서 팔레스타인 특강이 열렸다. 아랍계 이주민과 그 자녀가 많은 인천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특강이 열리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인천의 한 고교에서는 난민 인권동아리가 팔레스타인 연대 특강을 주최해 학생·교사 100여 명이 참가했다. 또 다른 인천의 고등학교 두 곳에서도 팔레스타인 난민 S씨가 연사로 왔다.

지난해 11월에 필자가 운영하는 인권동아리도 S씨를 초청해 강연을 한 바 있다. 이때 강연을 들은 학생 중 일부가

S씨와 함께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한편, 팔연교 교사들은 5월 25일 전교조 주최 전국교사대회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벌였다. "아이들을 죽이지 마라!" "이스라엘은 인종학살 멈춰라!" 구호가 담긴 배너와 팔레스타인 깃발 등을 걸고 인증샷 촬영, 뱃지 나눔, 리플릿 배포 등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이 많이 찾아와 부스가 북적북적했고 매우 활력 있었다.

팔연교 가입을 호소하며 "Free Palestine!" "Stop Killing Children!" "Stop Genocide!"를 외치자 손을 흔들며 응원하거나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와 이름과 연락처를 남긴 조합원도 많았다. 12개 지역의 교사 45명이 현장에서 바로 팔연교에 가입했고, 이후로도 추가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지역 교사들은 6월 말 팔레스타인 영화 상영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에서도 최근 팔레스타인 특강 사업이 운영위를 통과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이미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에 가맹해 연대해 오고 있다.

더 많은 교사들이 팔연교에 동참해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일부가 되길 바란다!

조수진 인천 중학교 교사



전남 무안의 한 학교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특강 소식이 팔레스타인 현지 매체에 실렸다



바이든의 휴전 제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 전역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학살을 중단하라는 미국 등 서방 지도자들의 무른 경고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계속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5월 24일 라파흐 공격 중단을 “명령”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카림 칸이 5월 20일 네타냐후 등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해도 이스라엘은 인종청소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이번 주 월요일 아침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21명이 숨졌다.

지난해 10월 7일 이래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된 팔레스타인인은 3만 6400명이 넘는다. 부상자는 거의 8만 3000명이다.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다. “우리가 본 것은 파괴와 잔해, 폐허, 더 많은 학살뿐이었다.”(가자지구의 언론인 호삼 쉬바트)

이스라엘군이 5월 7일 라파흐를 공격한 이래 10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라파흐에서 피난을 떠났다.

특히 지난 주에 이스라엘군이 라파흐의 “안전 지대”에 있던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을 두 차례 공격해 최소 66명이 사망했다. 그들은 텐트 안에서 산 채로 불타 죽었고 머리가 절단된 아이의 시신도 있었다.

이스라엘의 라파흐 학살에 미국산

무기가 사용됐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미국에서 설계·제작된 ‘GBU-39’라는 활강 유도 폭탄의 잔해의 모습이 담겨 있다.

GBU-39의 순 폭발 중량이 17킬로그램이다. 미국 정부는 대형 폭탄보다 이런 종류의 무기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이스라엘에 촉구해 왔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어 온 전술 차이이다. 그 차이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라파흐 학살이 “레드 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는 28일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지상전에 돌입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 탱크 한 대, 장갑차 한 대 정도로는 새로운 지상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거론할 만한 [대이스라엘] 정책 변화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스라엘 군인 수천 명과 탱크가 라파흐에 진입하고, 6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학살되고(그중에는 여성과 어린이가 많다), 100만 명 이상이 피란을 가야 했는데도, 미국은 “대규모 작전”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측에도 나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의 성원인 베니 간츠를 비롯해 일부 야권이 네타냐후에게 최후통첩적으로 촉구한 “전쟁 전략 계

획” 변화 수립 마감 시한(6월 8일)이 다가오면서, 전쟁 지속과 전쟁 “그 이후의 날” 계획 사이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5월 30일 베니 간츠의 국가통합당은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해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전쟁 지속을 원하는 연정 내 우파 정당들이 크네세트 전체 의석(120석)의 절반이 넘는 64석을 차지하는 만큼 조기 총선 요구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베니 간츠는 “전후 처리”를 두고 네타냐후와 각을 세우고 있다.

물론 야당 지도자들은 ICC 검사장 카림 칸이 네타냐후 등에게 발부한 체포 영장을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고, 국제 재판소들이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아일랜드와 스페인 등 몇몇 유럽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가자 전쟁의 범죄에 공모하고 있다는 국내 항의에 직면해 이스라엘에 조율 압박을 가하면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 호세프 보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자지구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협의회를 소집하는 데에 필요한 만장일치를 얻었다.”

유럽연합과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제후 협정(무역 협정)에는 “인권과 국제법 준수 의무” 조항이 있다.

그 “인권과 국제법”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에 의해 매일 무시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이 최근 폭로한 이스라엘의 ‘비밀 전쟁’은 또 다른 사례다(5월 28일 자). 이스라엘 정보 당국 모사드는 ICC 전 검사장 파투 벤소다 등을 통화 도청, 메시지·이메일 해킹, 문서 가로채기 등으로 9년 동안이나 감시해 왔다.

운동이 중요하다

세계인들은 이스라엘의 라파흐 학살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 또, 미국 등 서방 정부들이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을 여전히 지지하는 것에도 분노하고 있다.

지난주 전 세계 수십 개 도시들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5월 28일 영국 런던에서 1만여 명이 이스라엘의 라파흐 학살에 항의해 시위했다. 5월 27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는 수만 명이 이스탄불 주재 이스라엘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다.

파리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그 외에도 서울, 베를린, 로테르담, 튀니스 등지에서도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바이든과 네타냐후가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범죄에 대한 세계인의 분노가 정의를 요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때다.

김민식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이스라엘군을 또다시 물리치다

지난주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은 서안지구 제1 난민촌에서 이스라엘군을 몰아낼 수 있었다.

저항 세력은 시온주의자들이 공격을 시작한 지 겨우 7시간 만에 그들을 제1 난민촌 밖으로 밀어냈다.

제1 난민촌의 실라 두호르 마을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군 차량에 사제 폭탄을 던졌다.

지난달 이스라엘군은 제1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인 10명을 살해하고 25명 이상을 다치게 했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공격 전에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제1

에 첩자를 침투시켰다.

서안지구에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인 인권 운동가 자이드 슈아이비는 이렇게 전했다.

“제1 난민촌에서 제가 목격한 광경은 가자지구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길이 모두 파괴돼 흔적도 찾을 수

없어요. 상하수도, 전력 공급망, 통신망 같은 기반 시설도 파손됐어요.”

소피 스콰이어

출처 Sophie Squire, ‘Palestinian strength forces Israel to consider ceasefire – Palestinian resistance kicks out fresh assault’ (2024. 6. 03) / 번역 김준효